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4. 10. 6. Vol. 39

■ 농정이슈

정부, WTO에 쌀 양허표 수정안 제출(9.30.)

■ 정책브리핑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개편

■ 연구지원

2014년 고령자 통계

■ 현장여론

농업·농촌에 대한 규제개혁 및 제도 개선방안

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금주의 핫 이슈

〈정부, WTO에 쌀 양허표 수정안 제출 (9.30.)〉

- [정부, WTO 사무국에 쌀 양허표 수정안 제출, 9.30.] 쌀 관세화 시행(2015.1.1.) 위한 쌀 양허표 수정안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WTO 통보 내용(9.18.)'과 동일

〈쌀 양허표 수정안 내용〉

- 쌀 관세율은 WTO 협정에 근거하여 513%로 결정
 - (국내가격) 대표 도매가격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가격, (국제가격)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 수입가격 사용(기준연도는 WTO 농업협정에 명시된 대로 1986~1988년 적용)
 - 국제 쌀 가격이 관세를 계산 기준연도(1986~1988년)보다 훨씬 높아져, 상대적으로 보호효과 큰 종가세 적용
- 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수입량 급증 혹은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관세를 높여 국내시장 보호
- 2014년 의무수입물량 408,700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의 관세율로 수입 허용, 기존 국별 쿼터물량(205,228톤)은 글로벌쿼터로 전환
 - 밥쌀용 비중(30%),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장 등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적용되었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

- (주요 내용) 쌀 관세율 513%를 비롯하여 수입물량 급증 시 국내시장 보호 위한 특별긴급관세(SSG) 적용,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세율 등

- [WTO 회원국 검증 절차 진행] WTO 회원국은 한국 쌀 양허표 수정안 공식 회람된 이후 3개월간 동 양허표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이의 제기 시 한국은 모든 이의가 철회될 때까지 이의 제기국과 양자 협의 진행
 - ※ 전례: (일본) 제출(1998.12.21.) → 이행(1999.4.1.~) / (대만) 제출(2002.9.30.) → 이행(2003.1.1.~)

- [향후계획] 정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WTO 검증에 대응 철저

자료: KBS-YTN(2014.9.30.) / 경향신문-NEWSis·매일경제·머니투데이·서울경제·연합뉴스·이투데이·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2014.10.1.) / 한국농업신문(2014.10.3.)

참고: 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정부, WTO에 쌀 양허표 수정안 제출 - 앞으로 WTO 검증절차에 철저히 대응하여 원안대로 관철 노력 -」(2014.9.30.)

㉔ 농정이슈

□ 쌀 관세율 200~300%대 낮아질 가능성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

○ “野, 쌀 관세율 협상과정서 300%대로 낮춰질수도”

- (언론 보도) △(일본) 402엔/kg → 341엔/kg(16%↓), △(대만) 53NT\$/kg → 45NT\$/kg(15.1%↓), △(한국) 일본 대만처럼 15~16%↓(430%~436%), 중국이 아닌 일본 수입가격 사용 한다면 쌀 관세율 300%대로 줄어 들 수 있다고 보도
- (정부 입장) 일본 대만은 WTO 검증과정에서 WTO에 통보한 쌀 관세율(일본 341엔/kg, 대만 45NT\$/kg)대로 최종 결정, 검증과정에서 15~16% 삭감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 (일본) 조기 관세화 당시 WTO 농업협정에 따라 계산한 쌀 관세상당치는 402엔/kg, UR 이행기간(6년) 동안 선진국에게 적용되는 최소 15% 관세감축을 적용함에 따라 2000년부터 적용된 최종양허세율은 341엔/kg
 • (대만) 농업협정에 따라 계산한 쌀 관세상당치는 53NT\$/kg, 여기에 일본과 같이 선진국 최소 관세 감축률 15% 적용함에 따라 2003년부터 적용된 최종양허세율은 45NT\$/kg
 • (한국) WTO 통보 시, 농업협정에 따라 계산한 관세상당치 571%와 UR 협상 결과 개도국에 적용되는 최소 관세감축률 10% 적용한 최종양허세율 513%를 동시 제출,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대로 확정될 경우 2015년부터 적용되는 최종양허세율은 513%

○ “DDA 협상에 따라 수입쌀 관세율 274%로 낮아질 수도”

- (언론 보도) DDA 협상에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5년간 관세 46.7% 감축, 의무수입물량 3.5% 늘리는 방안 선택할 가능성 높고, 이 경우 쌀 관세율 513% → 274% 된다는 보도
- (정부 입장)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1995년)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2015년부터 시행해야 하는 조치, 현재 필리핀 쌀 제외한 모든 WTO 회원국의 모든 농산물은 이미 관세화

• 2001년 출범한 DDA협상은 13년간 진척이 거의 없어 타결 가능성 매우 희박하나, 타결되더라도 개도국 유지 시 쌀에 대한 관세를 감축할 의무 무(無)
 • WTO에서 개도국지위 유지는 자기선언원칙이므로 정부는 농업분야의 구조적 취약성, 낮은 식량 자급률 근거로 개도국지위 유지에 최선

자료 : NEWSis경향비즈연합뉴스(2014.9.29.)

참고 : 농식품부 해명자료, 「 “쌀 관세율 300%대로 낮아질수도” (뉴시스, 9.29) 보도 관련 해명」, 「 “DDA 협상에 따라 수입쌀 관세율 274%로 낮아질 수도” (연합뉴스, 9.29), “쌀 수입 관세율 513% 아닌 274% 될 수도” (경향비즈, 9.29.) 기사 관련 해명」(2014.9.29.)

<쌀 관세율 및 관세율 결정 전 국회보고 지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9.30.]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참석, 쌀 관세화·관세율 결정 전 국회보고 지연 사과

- ※ 2014.9월부터 4차례 상임위 거쳐 보고, 최종 결정 당시 일부 언론에 미리 보도되면서 발표를 더 미룰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

㉔ 농정이슈

- (의견 제기) △법정 절차 없이 WTO에 통보 논란, △쌀 관세율 513% 유지 요구, △TPP/FTA 쌀 양허제외 약속 촉구, △쌀 산업 발전대책 미흡 등

자료 : NEWSis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아주경제·연합뉴스·이데일리·이투데이(2014.10.1.) / 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업신문(2014.10.3.)

□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 [정부,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10.1.] 보완적 교역구조 가진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활성화

- ※ (캐나다측, 조속한 국내절차 완료에 강한 의지) 한·캐나다 FTA 가서명(2014.6.12.) → 의회심의에 기제출(6.13.) → 정식서명(9.22.) → 이행법률 상정(9.23.)

○ (한·캐나다 FTA 경제영향평가 결과*, 농축산업) 캐나다로부터의 돼지고가·쇠고기 수입 증가에 따라 연평균 약 320억 원(총 농업생산의 0.07%)의 국내생산 감소 예상

- ※ 6개 연구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참여, 한·호주 FTA 발효 시 부문별 경제적 영향 분석

자료 : 매일경제·머니투데이·서울경제·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2014.10.3.)

참고 : 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정부, 한·캐나다 FTA의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 한·캐나다 FTA로 제조업 수출증대(연 1.6천억 원) 및 생산증가(연 4천억 원) 기대 -」(2014.10.2.)

<한·베트남 FTA 제7차 협상 개최>

○ [한·베트남 FTA 제7차 협상 개최, 9.29~10.2, 서울]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통관, 협력 등 분야별 논의

- ※ (한국)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 수석대표로 정부대표단 참석
- ※ (베트남) 부 휘 손(Bui Huy Son) 산업무역부 무역진흥청장 수석대표로 정부대표단 참석

○ [한·베트남 정상회담 개최, 10.2, 서울] 한·베트남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필요성 공감, FTA 협상 연내 타결 노력 및 인프라 구축 등 협력

자료 : 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2014.9.30.) / KBS·MBC·YTN·서울경제·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한국경제·헤럴드경제(2014.10.3.)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제7차 협상 개최」(2014.9.29.) / 청와대 뉴스, 「한대통령, 한-베트남 MOU 서명식 및 공동기자회견」(2014.10.2.)

□ 풍년 맞은 국산과일 가격 폭락, 3년 만에 최저

- [풍년에 국산과일 가격 폭락] 이른 추석 이후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면서 과일 공급물량 크게 증가해 가격 하락과 함께 소비부진, 반면 수입과일(키위, 석류, 자몽)은 추석 이후 오히려 반사이익

㉔ 농정이슈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가격정보(9.25. 기준) ■

〈홍로 사과(15kg 상품)〉	〈신고 배(15kg 상품)〉
• 도매가격: 4만 8,800원, 9.1.(7만 1천 원) 대비 31.3%↓ • 9월 평균 가격: 6만 1,210원, 2011년(5만 7,270원) 이후 3년 만에 최저가	• 도매가격: 2만 8,400원, 9.1.(5만 6천 원) 대비 49.8%↓ • 9월 평균 가격: 4만 1,027원, 2011년(3만 8,853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영향) 복숭아·포도 등 끝물인 여름 과일과 최근 출하가 시작된 단감, 하우스 감귤 가격까지 하락
 - ※ 복숭아 백도 한 상자(4.5kg 상품) 9월 평균가격: 1만 6,460원, 2011년 이후 3년 만에 최저
 - ※ 거봉포도 한 상자(2kg 상품) 9월 평균가격: 9,667원, 2009년 이후 5년 만에 최저
 - ※ 단감·하우스 감귤 가격: 작년 이맘때보다 최대 약 30%↓

- [농식품부, 배 수급안정대책 추진] 추석 이후 구매수요 감소, 출하량 증가로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가공수매 지원* 통한 시장격리, △소비촉진 및 홍보, △수출확대 집중 추진
 - ※ 가공원료 구매자금 60억 원 지원

- (현장 의견 반영) (사과) 대체적으로 수급 안정, (복숭아·포도) 출하 마무리 단계에 있어 배 수급안정대책 중점 추진

자료 : YTN·한국경제TV(2014.9.28.) / YTN·국민일보·서울경제·연합뉴스·한겨레(2014.9.29.) / 머니투데이·세계일보·아시아경제·연합뉴스·이데일리·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2014.9.30.) / 농민신문(2014.10.1.) / 헤럴드경제(2014.10.2.)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식품부, 배 수급안정대책 추진 - 저급품 10천 톤 시장격리, 수출 확대, 대대적 소비촉진으로 가격안정 도모」(2014.10.1.)

□ 전국 189개 소방119지역대 폐쇄...농촌지역 출동시간 2배

- [소방서 건물만 있고 소방관 없는 폐쇄지역대 전국 189개*] 소방서 통합합 정책에 따른 농촌지역 소방119지역대 폐쇄됨에 따라 인명·재산피해 증가, 출동시간 2배
 - ※ 진선미 의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폐쇄지역대 현황' 자료 근거(9.25.)

-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농촌지역 출동시간 증가) 폐쇄지역대에서 사고 발생 시 인근 지역대가 현장까지 출동하는 시간이 평균 약 2배 증가, 소방관의 대폭적인 증원 통해 폐쇄지역대에 소방관 재배치 필요성 제기

자료 : news1·헤럴드경제(2014.9.26.) / 농민신문(2014.10.1.) / 한국농어민신문(2014.10.3.)

□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재해보험 대폭 개선

-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재해보험 상품 판매, 10.1~11.28.] 지역 및 품목 농협에서 수박 등 시설작물 17종, 농업용 시설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판매

㉔ 농정이슈

※ △보장범위: (주계약) 자연재해, 조수해 (특약) 화재 / △보험대상: (필수) 농업용 시설물 (선택) 부대시설, 시설작물 / △보험료 지원: 순보험료 50%와 운영비 100% 국고

- (필요성) 이상 기후 증가로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높으므로 농가경영안정 위해 보험 가입은 필수

※ 2014년은 연초부터 동해안 폭설과 경기 일산 용오름(강풍), 부산 집중호우 등으로 시설 원예농가의 피해가 이미 발생한 바 있음.

- (주요내용) △신규도입: 시설배추, 시설가지, 시설과(대파, 쪽파, 실파) / △시범사업 지역 확대: (기존) 70개 사군 → (확대) 100개 / △가입대상 확대: 과수(포도·감귤) 하우스, 상주형하우스 / △농가 편의 제고: 보험료 카드 납부 도입(수수료는 정부 부담)
 - ※ 전국판매: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 ※ 100개 주산지판매: 멜론, 파프리카,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자료 : news1·NEWSis·머니투데이·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2014.9.30.) / 농민신문·원예산업신문(2014.10.1.) / 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업신문(2014.10.3.)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안심농사 도우미! 농작물재해보험 꼭 활용하세요 - 시설작물 17종, 농업용 시설물 보험 10월 1일부터 판매 -」(2014.9.30.)

□ 농협, 영·유아 급식사업 브랜드 '안심키즈' 출범

- [농협중앙회 안심축산분사, 영·유아 급식사업 브랜드 '안심키즈' 출범] 영·유아 및 유치원 식재료만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브랜드로 급식사업 다양화 추진

- (주요 내용) 11월부터 영·유아원과 유치원에 식재료 공급, 농업박물관·농협 쌀 박물관·농협안성팜랜드 등 각종 견학 프로그램 무료 제공

자료 : 농민신문(2014.9.29.) / 농수축산신문·한국농어민신문(2014.9.30.)

□ 정부, 대북 비료 지원 재개 가능성 제기

- [5.24 조치 이후 대북 비료 지원 재개 가능성] 정부, 모든 것이 인도적 지원 물품 될 수 있다며 올해(민간단체 대북지원 물품) 비료 신청하면 승인여부 검토 입장
 - ※ 5.24조치 이후 2013년까지 정부는 대북지원 대상을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정, 쌀·옥수수·와 같은 농축산 물품에 대한 반출 및 비료 지원 금지

- [남북 간 첫 육로왕복 영농물자 지원, 9.30.] 재단법인 에이스경암, 남북 간 최초로 내륙 육로왕복 수송 방식으로 사리원시*에 농업협력 영농물자(은실용 자재, 종자, 배양토 등) 지원

※ 2009년부터 영농 지원 시작해 현재 비닐하우스 50동 규모의 시범영농단지 운영 중

자료 : KBS·MBC·동아일보·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2014.9.30.) / 경향신문·국민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헤럴드경제(2014.10.1.)

㉔ 농정이슈

<북한, 농업정책 개혁 2015년부터 시행>

- **[북한, 농업개혁 추진, 2015년부터 시행]** 경제관리개선조치 일환으로, 이를 위해 협동농장이 농사에 필요한 종자비료농기계를 농민에게 지원
 - (주요 내용) △생산 체제: (기존) 4~6명 분조단위 관리제 → (변경) 가족단위 자율경영체 / △생산 분배: (기존) 7:3(국가:개인) → (변경) 6:4 / △토지: 가족 1명 당 땅 1,000평 지급 예정
- **[농업개혁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 1차산업 부가가치 증가 이룰 경우 (개혁 1년차) 북한 GDP 성장률 7.5% 추정 → (개혁 9년 차) 2013년 GDP 30조 원 2배 규모인 63조 원(이상, 한국 원 기준) 달성 전망

자료 : YTN(2014.9.25.) / 아시아경제연합뉴스(2014.9.26.) / 조선일보(2014.9.30.)

참고 : 현대경제연구소 현안과 과제_「북한 농업개혁이 북한 GDP에 미치는 영향」(2014.9.24.)

□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가에서 AI 의심축 신고

- **[전남 영암 소재 육용오리 농가(26천 수) 의심축 신고*, 9.30.]** 가축 방역관 현지 확인 결과, 폐사 수 증가(10~20수 → 200) 등의 AI 의심증상 보임에 따라 농가에 대한 초동방역팀 투입, 이동통제 등 AI 대응 메뉴얼 따라 조치 중
- 자료 : KBS(2014.9.30.) / 내일신문NEWS매일경제머니투데이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이데일라파이낸셜뉴스(2014.10.1.)

<칠레 축산업 아그로수퍼, 27년간 가축질병 없어 생산성도 세계 최고>

- **[칠레 축산업 아그로수퍼, 가축전염병 예방 위해 ‘농장출입 여권제’ 실시]** 45개국에 축산물 수출하는 아그로수퍼는 27년간 가축질병 없어 생산성도 세계 최고, 구제역 백신 사용 하지 않으며, 국경검역 철저, 질병청정지역 유지 노력 강조
 - (가축질병 발생 시 손해 책임) (아그로수퍼) 축산업자 - (한국) 정부 예산으로 보상
- 자료 : 내일신문(2014.10.1.)

<효능 없는 PED(돼지유행성설사병) 백신, 피해 소송 제기>

- **[양돈농가 6명, PED 백신 제조사 상대로 피해 소송 제기]** PED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효능이 없어 백신 제조업체(4개사) 대상으로 소송 제기(9.26일), 한돈협회가 법적대응 위한 소송지원
- 자료 : 농수축산신문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업신문축산신문(2014.10.3.)

㉔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개편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9.30.)

□ 개요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농촌진흥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개정시행, 9.30.]** 복잡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절차 통합, 인증 기준 내실화, 농업인의 GAP 인증참여 용이, 먹거리 안전성 강화하는데 중점
 -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제도: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성 확보, EU, 미국 등 보편적 운영

□ 주요 내용

- **[복잡한 GAP 인증 절차 통합(3단계 → 1단계)]** 농업인이 GAP 인증기관에 한번만 인증 신청하면 모든 절차를 인증기관이 통합처리 하도록 단순화
 - ※ 행정처리기간 단축(최대 126일 → 42), 구비서류 감축(12종 → 3)
- **[GAP시설 인증 의무 규정 폐지로 농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 농가별로 작업환경에 따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되면, 인증 가능하도록 개선
 - ※ 타인의 GAP시설 경유비용 또는 자가 GAP시설 설치 의무 부담 완화
- **[이력추적관리 간편화]** GAP 제도에 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데도 별개의 등록 제도인 이력추적관리제도에 의무적 등록 폐지
-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신설로 농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 농업인이 ‘위해요소 관리계획서’ 작성하고 인증 시 적합여부 심사
- **[GAP인증 농산물 표시사항 개선으로 농업인의 불편사항 해소]** GAP 인증 농산물의 표시사항 중 ‘등급’, ‘이력추적등록번호표시’ 의무표시 규정 삭제
- **[농가의 수준별 차등 관리로 농가 부담 완화]** 인증심사 결과 85점 이상은 적합, 70~84점은 컨설팅 통해 수정·보완하여 재심사
- **[향후계획]**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소비자 기대수준에 부응,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한국 농산물의 차별화된 경쟁전략으로, GAP 농산물 (현재) 경지면적의 3% 수준 → (확대) 2017년까지 30% 수준

친환경농산물 신뢰 향상 위한 민간인증기관 관리 강화

□ 주요 내용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10.1.)] 친환경농산물 신뢰 향상 위한 민간인증기관 관리 강화
 -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지정 기준 강화) 인증기관 지정기준인 인력과 시설 갖춘 자를 인증심사원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개정
 -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교육, 자격 취소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근거마련) 농식품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경력 2년) 취득하고 자격교육 이수한 사람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인증기관 지정취소 사유 확대, 형사처벌 강화*, 수입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 및 표기기준 적합성 조사근거 마련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또는 인증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에 대해 형사처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10.1.)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에 적합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마련 위한 지자체 표준 조례·규칙(안) 배포

□ 주요 내용

- [농식품부·식품약품안전처,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완화 위해 시·군·구 적용할 표준조례·규칙(안) 마련·배포, 설명회 개최] 농업인 가공시설의 영세성 고려하면서 식품위생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설기준 완화
 - (주요 내용) △작업장을 장기간 미사용 시 농산물 등 식품 보관 용도로 활용, △물을 사용하지 않는 식품제조·가공 공정은 작업장 벽, 천장 등 내수성 재질 사용 의무 예외 인정, △수돗물, 지하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영업시간동안 사용할 충분한 양의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 활용 허용 등
 - (4대 권역별 설명회 개최) 충청(세종, 9.29.), 경기·강원(서울, 9.29.), 전라·제주(광주, 9.30.), 경상(대구, 10.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9.29.)

안전예산(안) 세부 투자내용(농업분야)

□ 주요 내용

- [정부, 안전예산(안)* 재편] 2015년 최초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안전 관련 사업을 모아 안전예산으로 재편(12.4조 원 → 14.6)
 - ※ 안전예산 대상 세부사업은 민간전문가, 각 부처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 논의 결과 토대로 결정, 안전예산은 소방예산 뿐만 아니라, 서민층 생활 안전, 산업·교통 안전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다양한 사업 포함
 - (목적) 안전예산의 포괄범위·세부내역까지 공개함으로써 투명 관리
 - (체제적·효율적 관리, 기능별 7가지 분류) ①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② 위험시설 기능 강화, ③ 교육훈련, ④ 안전 R&D, ⑤ 안전기능 보완 지원, ⑥ 재난예방 보완시설 확충, ⑦ 예비비

Ⅱ 안전예산 주요 사업(농업분야)

단위: 억 원

부처명	사업명	분류	2014년	2015년(안)
농림축산식품부	수리시설개보수	2	4,800	5,297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2	500	550
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	2	2,900	2,950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대책비	1	2,176	2,176
농림축산식품부	다목적농촌용수개발 (가뭄대비 수리시설 설치)	6	2,600	2,800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가뭄대비 소규모용수, 지표수보강)	6	673	603
농림축산식품부	시도가축방역	1	770	1,000
농림축산식품부	살처분보상금	1	600	1,50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1	2,701	2,853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1	397	487
농림축산식품부	재보험금	1	230	230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식품안전관리	1	15	16
농림축산식품부	수리시설유지관리	6	1,565	1,590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	1	331	397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안전성조사	1	191	197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	1	114	152
농림축산식품부	동축산물검역검사	1	94	92
농림축산식품부	도축검사원운영	1	46	76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검사	1	37	41

부처명	사업명	분류	2014년	2015년(안)
농림축산식품부	동축산물검역검사	1	94	92
농림축산식품부	도축검사원운영	1	46	76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검사	1	37	4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컨설팅	5	16	16
농림축산식품부	대규모농업기반시설 지수능력증대사업	6	163	263
농림축산식품부	한발대비용수개발	6	125	125
농림축산식품부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먹거리 안전)	4	82	74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백신연구센터건립	4	63	15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4	213	199
농 촌 진 흥 청	농작업재해예방	3	13	13
농 촌 진 흥 청	친환경안전농축산물생산기술 (안전 먹거리 개발)	4	58	53
산 림 청	산림분위기후변화 대응 연구사업	4	64	67
산 림 청	재해대책비	1	-	300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관리운영 (식약 관련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홍보)	5	5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운영 (식품안전 국민인식도 제고)	5	15	17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평가원 지원(식품위해평가, 독성물질의약품 안전관리)	1	18	24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축산물 검사	1	38	3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1	46	46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기준규격 설정 평가	1	11	1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 안전관리	4	245	292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수산 안전관리	4	23	3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1	31	37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 근절 추진체계운영	1	22	23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활성화	1	82	83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1	23	2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기준 규격 설정 평가	5	7	1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예방 및 관리	1	44	54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1	255	36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운영	1	24	40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식품안전관리	1	24	27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수산물검사	1	39	36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운영	1	85	78

자료 : 기획재정부(2014.9.29.)

연구지원 2014년 고령자 통계

자료 : 통계청(2014.9.29.)

☐ 인구

- [2014년 고령인구비율*]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 중 12.7%(인구 8명 중 1명), 매년 증가 추세
- [2014년 고령자성비(여자인구 100명 당 남자의 수)] 71.3명
- [2014년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17.3명, 생산가능인구(15~64세) 5.8명이 고령자 1명 부양
- [2014년 고령가구비율] 5가구 중 1가구(20.1%)는 고령가구, 1인 고령가구는 7.1%
 - (고령인구 비율 높은 지역) 전남(21.8%) > 전북(18.1%) > 경북(18.0%) 순
 - (고령인구 비율 낮은 지역) 울산(8.3%) > 경기·대전·인천(10.1%) 순

☐ 보건

- [2013년 사망원인] 가장 큰 사망원인은 암(인구 10만 명당 836.6명), 다음은 뇌혈관 질환(353.0명) > 심장질환(335.6명) > 폐렴(166.6명) 순
 - (암 종류별 사망률) 폐암(인구 10만 명당 217.7명) > 간암(103.5명) > 위암(99.5명) 순
- [2012년 기준 60세 고령자의 기대여명] 남자 21.6년, 여자 26.6년
 - (유병기간 제외 기대여명) 남자 12.6년, 여자 13.4년
 - (주관적 건강 기대여명) 남자 13.3년, 여자 12.0년

· (기대여명) 특정연령 X세의 생존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년수
 · (유병기간 제외 기대여명)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아프지 않은 기간
 · (주관적 건강 기대여명)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기간

- [2013년 고령자 진료비] 전체 진료비(50조 7,426억 원)의 34.5%(17조 5,283억 원), 1인당 진료비는 305만 원(전년대비 4.1% ↑)

☐ 경제활동

- [2013년 고용률] 55세 이상 고용률 47.2%, 65세 이상 고용률 30.9%
 - (연령대별) '60~64세(57.2%)' 고용률이 '20대(56.8%)' 추월
 - ※ '50대' 73.1%, '30대' 73.2%

연구지원

- [2014년 취업 희망 비율] 고령층(55~79세) 중 62.0%(인구 10명 중 6명)
- (이유) '생활비에 보탬(54.0%)' > '일하는 즐거움(38.8%)'
- [2014년 일자리 선택기준] 고령층(55~79세) '일의 양과 시간대(28.0%)'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임금수준(23.1%)' > '계속 근로 가능성(18.6%)' 순
- [2013년 임금수준] 5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월 급여는 전체 평균(=100)의 93.1 수준
- [2013년 가계수지]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269만 원)은
전국 가구 평균(416만 원)의 64.7% 수준
- [2013년 지니계수와 빈곤율] 65세 이상 인구의 지니계수 0.420, 빈곤율 48.1%

복지

-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중 고령자 비율 29.9%
- [2013년 공적연금*] 65세 이상 고령자는 37.6% 수준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 (2014년 고령층(55~79세) 인구 중 연금* 수령자 비율) 45.7% 수준
※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개인연금 등
- [2013년 고령자 생활비] 주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마련(55.2%)'이 가장 많았고,
'자녀 또는 친척지원(35.4%)' > '정부 및 사회단체(9.3%)' 순
- [2013년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 '건강문제(65.2%)' > '경제적인 어려움(53.0%)'
- [2013년 고령자가 원하는 복지서비스] '건강검진(30.2%)' > '간병서비스(25.9%)' >
'가사서비스(19.2%)' > '취업알선(8.4%)' 순
- [2013년 노후 준비방법] 노후 준비하고(되어) 있는 가구주는 44.9%, 주된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

• (고령, 고령자) 65세 이상(고령인구비율, 고령자성비, 노년부양비, 고령화가구비율, 사망원인, 기대여명, 진료비, 지니계수와 빈곤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적연금 수급자, 생활비, 경험하는 어려움, 원하는 복지서비스, 노후 준비방법)
• (고령층) 55~79세(취업희망비율, 일자리 선택기준)
• (임금수준) 55세 이상(임금근로자의 월 급여 수준)
• (가계수지) 60세 이상(월평균 소득 수준)

※ 원본 자료는 정보마당에 게시

KRE리porter 현장여론

현장여론 농업·농촌에 대한 규제개혁 및 제도 개선방안

자료: KRE리porter를 대상으로 장의정보실 자체 조사

조사 개요

- 수집기간: 2014. 9.1. ~ 9.30. (총 32건)
- 수집대상: KRE리porter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팩스, 우편 수집

농업·농촌에 대한 규제개혁 및 제도 개선방안

- 농림축산식품부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농업의 6차산업'을 위해서는 농산물
제조가공업과 6차산업 관련 시설물 설치, 토지이용 규제 등 행정규제 완화가
시급함.<김용덕, 경기 남양주 외 5>
- 농지 및 산림전용 절차 등 각종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농산물 가공업에 위생·
폐수 처리시설 설치 등 농업분야 규제가 많음.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개혁 선진
사례 벤치마킹 등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인에 제도 알리를 통한 홍보 요망함.
<배병열, 전남 무안>
- 지자체 지원으로 여러 체험마을이 생겨났으나 마을의 경영능력 부족, 식당·숙박
농산물 판매 등 허가 까다로워 체험마을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허가가 필요한
기존 규제를 줄이고 6차산업에 필요한 농업과의 융합산업이 들어서는 장벽을
줄여 최소한의 규제와 절차만이 남도록 개혁이 필요함.<변해동, 강원 홍천 외 1>
-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대책으로 학교 현장학습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져
농어촌 체험학습도 정부인증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실정임. 소규모 농촌체험장,
식당마다 인증받기는 사실상 어려워 제도의 재검토를 바람.<임충빈, 경기 안성>
- 환경 개선과 건강증진 위한 친환경·유기농업이 증가하면서 최근 우렁이 농법이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어 우렁이 양식이 증가하고 있음. 친환경 농업을 위한 양식임
에도 불구하고, 우렁이 양식이 어업으로 취급되어 농업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농업 후방산업으로 인정해 제도를 변경해주길 바람.<노용곤, 전남 나주>

☞ KRE리포터 현장여론

- 인삼공사의 수삼 등급분류방식은 몇 가지 샘플을 육안으로 평가해 등급기준이 모호한 실정임. 1등2등 상품이 적게 분류되어 수매가는 계속 오르는 반면, 인삼농가에서 받아가는 평균수매가격은 오르지 않아 인삼농가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객관적인 수삼 등급분류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함.<오형동, 전남 해남>
- 무농약 인증기간 단축으로 인증수수료가 두 배 늘어 자기부담금이 증가하고 인증절차까지 복잡한 실정임. 수수료 비용 절감 및 인증절차 간소화로 친환경 농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나종주, 전남 화순 외 1>
- 대규모 양축시설의 오피스, 악취문제로 마을환경 악화시키고 농지의 가치하락으로 주변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음. 기존 시설 인근 주민에게 피해보상 또는 격리된 위치로 이전을 권고하고 새로 건립을 허가할 때는 인근농지 주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제해야함.<윤석구, 경북 군위>
- 해남지역 대표 농산물인 김장배추, 월동배추의 수요·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가격 폭등과 폭락이 수년 동안 반복되고 있음. 농업인 스스로 재배면적이나 작황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생산면적을 규제해 과잉생산을 방지해야 함.<오형동, 전남 해남>
- 지자체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남용사례가 많아 지원을 받고도 영농 및 관리 안 되는 곳이 많음. 비닐하우스 지원요건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고정식, 제주 제주>

□ 기타 현장여론

- 농촌은 다른 관광명소에 비해 관광이 활발하지 않은 편임. 역사문화체험, 특산물 등 지역고유 농촌관광 홍보를 적극 나서야 함.<전연수, 경남 의령 외 1>
- 1차산업으로서 농업에는 정책이나 지원이 부족한 반면, 6차산업에만 치중된 정책으로 오히려 ‘농업’ 본질에 대한 정책이 부족함.<송인숙, 강원 강릉>
- 유기질비료 보조사업, 농가 수요에 맞게 물량 확대 지원 바람.<유영순, 충남 서산>
- 해남지역 매뚜기 떼 출현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했음. 생태계 변화에 따른 병해충의 피해 대비책이 범 정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임.<오형동, 전남 해남>
- 국사유림 구분 없는 산불예방 및 진화를 실시해 주길 바람.<변해동, 강원 홍천>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기획조정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나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